

## 해외전력

# 인도, 배전·소매 공급부문의 현황과 과제

인도의 전력분야 최대의 과제는 배전·소매 공급 부문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급속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력 부족이 문제가 되어 울트라매가파워 프로젝트(출력 4,000MW급의 석탄화력 발전소를 국내 9개소에 건설하는 프로젝트) 등 발전 부문에 대한 대형 투자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력 부족의 해소에 방해가 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배전·소매 전력의 공급부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는 인도의 배전·소매 공급 부문에 관하여 소개한다.

## 1. 인도의 전력공급체제

인도에서는 독립 이후 1990년대 초까지 공공 기관이 전기사업의 경영을 거의 독점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1948년에 제정된 「전력공급법」에서는 전력의 공급을 주(州) 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각 주 정부는 전력국(SEB : State Electricity Board)을 설치하여 수직통합형 사업자로서 전력 공급을 행하여 왔다. 한편, 중앙 정부는 전국 수준의 전원개발계획의 책정과 대규모 발전소 및 장거리 송전선의 건설·운전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제는 전국적인 SEB의 경영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서서히 막다른 골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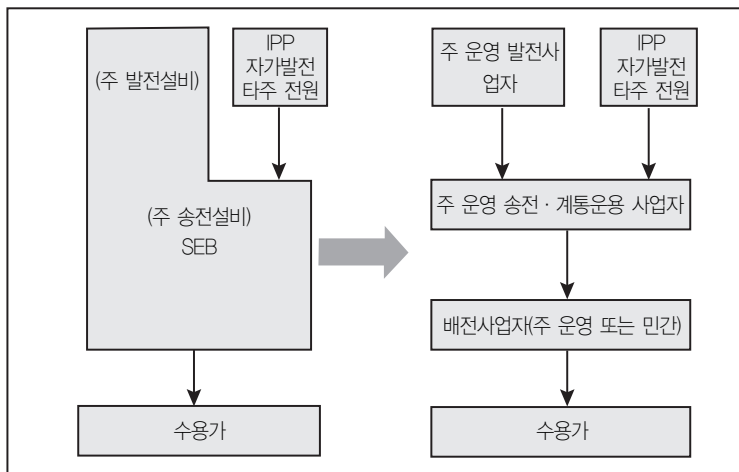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 최대의 원인은 발전 코스트에 기초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에 있었다. 1980년대에 인도에서는 가정용 및 농업용 전력의 소비량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요금은 발전 코스트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에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낮은 전기요금과의 차이를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가격이 높게 설정된 공업용 요금에서의 내부 보조와 주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 이용되었으며, 가정용·농업용 전력의 소비량도 해마다 증가함과 아울러 SEB의 재정 상태가 같이 악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 2. 전력분야의 개혁

SEB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차차로 주 정부 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었으며 거기에 40%를 넘는 높은 송배전 손실률과 낮은 요금 회수율도 SEB의 경영에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 결과 SEB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와 노후화된 설비의 유지보수·갱신이 어려워져 빈번한 정전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도 정부는 1991년에 경제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력분야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우선 정부는 발전부문에 대하여 외자를 포함하



〈그림〉 주 전력국(SEB)의 언번들링의 개념도

는 민간 자본의 참여를 자유화하고 이어서 각 주 정부에 대하여 전기사업 체제의 개혁을 서두렸다.

개혁의 요점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수직통합형 사업자였던 SEB의 언번들링(Unbundling)이다(그림 참조). 거기에는 발·송·배전 각 부문의 수지(收支)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 경영을 촉구하는 목적이 있었다.

또 하나는 요금관계의 인허가권과 영업 면허의 교부권을 갖는 독립 규제위원회의 설립이다. 위원회의 최대 목적은, 요금 설정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가능한한 배제하고 전기요금 특히 가정용·농업용 요금에 생산비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다.

### 3. 현황과 과제

이상과 같이 개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배전·소매 공급부문에 있어서는 그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인도 전력성(電力省)은 2006년 9월, 각 주의 전

력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의 개혁의 결과 SEB에서 분리된 전국의 거의 모든 발전 및 송전 사업자에 있어서는 재무 체질이 호전되어 사업 수익을 올리는 상태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배전·소매 공급사업자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업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농업용 요금수준의 적정화의 지연, 높은 배전 손실, 도전방지대책의 불철재 등, 개혁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의 개선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요금수준의 적정화는 각 주에 독립규제기관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에도 주에 따라서는 선거의 쟁점의 하나로 되고 있는 등,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로 되어 있어 해결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배전·소매 공급사업자의 경영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이들 문제의 해결은 불가결한 사항이다. 발전사업자에 있어서 판매 상대인 배전·소매 공급사업자의 취약한 경영상태는 하나의 커다란 리스크이며 국내외 민간자본의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8~12%라고 하는 전력의 공급력 부족이 해소되지 못하면 순조로운 경제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태의 조급한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출처: 일본전기협회 발행 「전기협회보」)